



하시모토 내각 하의 북일 수교 협상 전망

남창희

한국국방연구원 일본연구실 선임연구원

북일간 수교 협상 전망은 한국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임 하시모토 총리는 기존의 對북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고, 1996년에 들어서서 북미간 관계 개선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노정하면서 동시에 북일 접촉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일본의 집권 연립 여당의 대표단 북한 파견 계획 추진, 日朝議員聯盟의 복원으로 對북한 접촉 채널 확대, 외무성 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접촉, 일본 東京新聞의 양국 관계자의 수교 협상 재개의 원칙적 합의 보도 등은 양국간 접촉이 진행 중임을 시사하였다.

이처럼 일본이 대북한 수교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脫냉전기에 대두된 북한의 핵무장의 가능성과 이로 인한 중동이나 회교원리주의 세력 및 기타 종교 민족 분쟁 지역으로의 확산 우려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일본의 하시모토 내각은 앞으로 미국의 對北 정책의 수위와 발맞추어, 북한내 김정일 정권의 對日 수교 의지의 강도 변화 등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1996년 중에도 대북 관계 개선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이 예상된다.

교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일본, 북한이라는 과거의 적성국간의 수교 협상은 냉전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전후 자민당의 전통적인 對한반도 기본 원칙 중의 하나는 한국 정부를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하면서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일본의 안보 위협으로 파급되는 것을 억지하는 것이었다.¹⁾

최근의 북일 수교 협상은 이러한 일본의 기본적인 對한반도 외교 정책 기초의 근본적인 변질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동북아 국제 하위 체제의 중요한 변동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북일 관계 개선을 전망하기 위하여 북일 수교 교섭의 발전 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북일 수교의 요인들 중에서 미일 협조 체제라는 외

서론

19 96년에 북미 관계 개선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일본의 대북 식량 지원과 지속적인 교섭 노력에서 보이는 것처럼 북일 수

1) 둘째는 장기적으로 통일 한국 혹은 한국이 일본에 적대적인 정부가 대두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었고, 셋째는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외교적 영향력을 유지 및 확대하는 것이었다. 전동진,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민족통일연구원, 1992; 전동진, 「일본의 대북한 정책」, 민족통일연구원, 1993.

부 투입 요인을 중점적으로 조명하면서 다른 여타 요인의 비중과 비교하여 현 히시모토 내각 하에 향후 북일 수교의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일본의 對북한 관계 개선의 부침

(1981. 3~1994. 10)

냉전기에 일본의 대외 정책을 주도한 일본 자민당은 친북 노선을 견지한 사회당과는 달리 냉전기에는 대북 적대 정책으로 일관하였었다. 스나이더(Snyder)와 디징(Diesing)이 그들의 구조적 현실주의에서 냉전기 군소국의 외교 정책의 기본적 결정 요인이 냉전 체제라는 국제 체제의 구조에 있다고 했던 것처럼 냉전기에 일본의 대북 정책은 미국의 대북 정책과 동일하였다.²⁾

일본의 대북 접촉이 시작된 것은 1965년에 국교 정상화를 한 한국보다 훨씬 늦게 1981년 3월 북한 노동당과 일본 사회당이 동북 아

시아 지역 비핵, 평화지대 창설 공동선언을 발표한 때부터였다. 이 당시부터 일본은 대북 관계 개선을 타진하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에서 대북한 접촉을 시작하였다. 북일 관계는 그러나 1983년의 랑군 폭파 사건과 1988년 1월 김현희의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수년간 공식적인 접촉없이 냉각되었다.

그러다가 구소련이 붕괴하고 탈냉전기에 들어오면서 1991년 북일 교섭이 재개되었다. 그 계기는 일본이 1990년 9월 가네마루 신(金丸 信) 前 자민당 부총재를 대표로 한 자민당, 사회당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1990. 9.24~28)한 일본측의 적극적인 접촉 재개 노력에 있었다. 당시 한국의 성공적인 구소련과 중국과의 북방 외교 성과를 상쇄해야 할 필요가 있던 북한측도 일본에게 국교정상화 교섭을 제안하면서 양국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었다. 북일 양국은 평양에서의 협상을 통해 기본 외교 현안과 과제를 명시한 자민당, 사회당, 북한 노동당 3당간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공동선언의 핵심적 내용은 우선 과거 일본이 한반도 강점 시기에 한국인에게 끼친 고통과 재난, 전후 45 년간의 일본의 대북한 적대 정책으로 인한 북한의 손실을 사죄하고 보상할 것을 일본이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이 카네마루의 김일성에 대한 사죄 발언과 보상

2) 스나이더와 디징이 일본 외교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논리를 전후 일본 외교 정책의 특질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Glenn Snyder and Paul Diesing, Conflict among Nations(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또한 월츠의 구조적 현실주의도 미일 관계와 냉전기 일본의 외교 정책의 한계를 설명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Reading, M. A.: Addison-Wesley, 1979).

약속은 일본 대표단이 귀국하자마자 일본 정계에서 실패한 외교라고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조항이다. 그리고 同선언은 일본 정부가 국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동시에 배상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공동선언에서 빠지지 않은 것은 북한의 핵개발을 염두에 두고 장래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핵 위협 등을 없앤다는 것도 첨가하였다. 여기서도 탈냉전기에 구소련의 팽창 대신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 일본의 대북한 교섭의 주요 관심사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후 북일 양국은 1991년 1월 30~31일 양일간 제1차 북일 수교 교섭을 시작한 이후 1992년 11월까지 거의 2년간 8차에 걸친 수교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은 양측의 팽팽한 대립을 노정하면서 제8차 수교 교섭(1992. 11. 5~6)에서 일본측이 또 다시 이은혜 납북 문제와 북한의 핵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은 돌연 회담을 중단시켜 버렸다.

당시 북일 양국간의 협상 과정에서 부각된 외교적 현안은 현 시점의 북일 수교 과정의 현안도 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무엇보다도 일본이 북한만을 유일한 한반도의 합법 정부로 승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수교 협상의 장애를 조성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과거 청산과 승전국으로서의 배상 문제 및 전후 보상 문제를 수교 교섭에 연계하는 데 집착하였다. 북한은 일본의 대북한 수교 접근을 그들의 경제 이익 확보에 직결시키려 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만주에서의 항일 빨치산 활동과 북한 정권의 정통성 여부는 수교 협상의 논점 외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리고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빨치산 활동을 정식 국가의 전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교전국간의 배상이 아니므로, 재산 청구권의 차원에서만 대화의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측의 이러한 과거사 문제의 외교 공세에 맞서 일본측은 KAL기 사건에 일본인 여성이 강제 납북되어 일본어 교사로 이용된 이은혜 사건을 북미 수교 교섭의 전제 해결 문제로 거론하였다.

또한, 북일 수교 협상의 직접적 유인 요인이 되었던 핵개발 문제가 이 시기부터 북일 수교 협상에 중심적 현안으로 대두되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일본 및 미국의 정보 기관이 탐지한 스커드미사일의 개량형인 북한의 사정 거리가 1,000 km가 넘는 미사일 개발을 지목하면서 동시에 생화학 무기 등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 지적하였다.

그런데 1992년 11월의 북한의 일방적인 수

교 협상 중지 후 북한이 1993년 3월 IAEA 탈퇴를 선언하자 바로 기존의 2년간의 수교 협상이 전면 중단되게 되었다. 이것은 일본측이 강력하게 북일간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서 북한의 핵 의혹 해소를 들고나왔기 때문이었다.³⁾ 이러한 1993~94년에 걸친 초기의 일본이 북한의 핵 무장 의혹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미일 공동 무력 제재에 의한 해결 방안이 검토되던 강성 기조의 상황에서 나온 입장이었다.⁴⁾ 여기서 일본의 대북 비난 및 회유 등의 외교 행태를 보면 북한의 핵무장 문제가 대북한 관계의 중심적 현안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⁵⁾

한편, 대북한 경제 제재 등 강성 기조가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1994년 중반기까지 일본은 대북한 정책에 대한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1993~94년 자민당 정권 붕괴 후 연립여당의 연속된 재편 과정으로 일본 국내 정

치가 불안정해지면서 외교 정책 수립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북한 정책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연립여당은 1994년 4월 19일 각당 대표자 회의에서 사회당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대북한 정책 연정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정합의안에서는 평화헌법 제9조의 원칙을 지킨다는 입장보다는 UN의 입장을 존중하여 미일간 협력 체제가 요구할 경우 UN을 경유하거나 미국, 한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대처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주목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사회당 등의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고 주변국과 평화적으로 대화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을 첨가시킨 점에서 대북한 강경 조치보다 유화적으로 선화하

3) 북한 핵 개발 의혹에 대해 일본은 당시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1993년 3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부총리겸 외상 와타나베 미치오는 북한의 NPT 탈퇴 철회가 북일간 국교 교섭의 전제 조건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4) 이미 일본은 1963년의 미츠야 연구 등 한반도 유사시 미일 공동 작전 연구와 미일 방위 협력 지침 이후의 유사 연구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의 일본의 대미 협력의 방법을 심도있게 연구하였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을 심도있게 연구한 최근의 자료는 오자와가 회장으로 있는 일본전략연구센터의 보고서인 日本戰略研究センタ, 「世界に生きる安全保障 - 21世紀への指針」, 1994, pp. 97~121을 참고.

5) 북한측은 한편 일본의 대북 핵의혹 공세에 맞서 수교 회담 당시부터 일본의 문주(文殊)와 로카쇼부라(六所村)의 핵 재처리 시설과 다량의 플루토늄 도입을 핵무장의 시도라고 비난하였고, 노동신문 등 언론 매체에서 일본의 핵무장 잠재력의 위협이 더욱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북한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동시에 일본의 첨단 무기 구입 등 군사력 강화의 위협을 전진의 군국주의와 팽창주의의 부활 움직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측은 전혀 핵개발 의혹이 없다고 강변하였다.

6) 이와 같은 강은 양면의 이중적인 일본의 대북한 외교 정책은 일본이 북한과 같은 패쇄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나라가 핵무장을 하고 일본을 사정거리 내에 두는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 결코 좌시될 수 없다는 현실적 입장과 대북한 제재의 강경책이 한반도의 위기로 발전되는 위협성에 대한 경계심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 경계심이 보다 강경했던 미국보다 북한에 인접한 일본의 대북한 정책이 유화적이었던 점을 설명할 수 있다.

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었다.⁷⁾

특히, 이러한 일본 정부의 대북한 유화책은 현재의 일본 국내 정치 과정에서 과거에는 만년 야당이었던 사회당이 자민당과 신보수주의 세력의 양자간에 동시에 이용되면서도 정권의 일부를 점유하면서 일본 외교에 나타난 이중성을 반영한 것이다.⁸⁾

핵 타결 이후의 북일 수교 교섭 과정 (1994. 10~현재)

1994년의 미국의 강경한 대북 제재의 입장이 카터의 평양 방문으로 인한 타결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다시 유화적인 대북 접촉이 개시되었다. 무엇보다도 1994년 7월의 김일성 사망 후에는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북한에 대한 조심스러운 대화 정책이 주류로 자리잡게 되었다. 미국측의 적극적인 대화 정책과 북한측의 수용으로 결국 1994년 10월의 북미 핵문제의 제네바 타결을 보게 되었다. 이어서 미국은 북한의 경수로 건설 비용 및 폐연료봉 처리 비용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비 부담

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앞에서 언급한 지금까지의 협상의 성과를 발판으로 북일간 수교를 위한 교섭을 다시 시작하였다.

일본 연립여당은 일본 안보의 최대 문제로 대두된 북한 핵문제의 조기 해결과 북한의 개방 유도로 역내 불안정 세력의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국가 이익으로 간주하고 수교의 추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연립여당은 북미 제네바 핵 타결 직후인 1994년 11월에 구보(久保) 사회당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교 협상대표단 파견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모리(森) 자민당 간사장, 자민당 총무회 및 외무성 등의 신중론에 밀려 의견 조정을 하던 중 북한의 일본 대표단 방북 거부로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 일본 정계의 신중론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1990년의 3당 공동선언이 일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에서였다. 그리고 이은혜 문제의 선결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북일 수교를 조금 하게 서두를 경우 한국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대북 경수로 지원의 경비를 일본이 과도하게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⁹⁾

한편, 1994년 10월 29일 방한한 사회당 출신의 이가라시 일본 관방장관과 김영삼 대통령과의 회담과 무라야마에의 요청에서 나타

7) 전통적으로 일본 사회당은 한국 정부보다는 친북한 정책을 취해왔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에서 무라야마(村山) 前 수상을 중심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회당이 연정에 포함되어 있을 때 북일간 수교가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8) 「産經新聞」, 1994년 11월 2일자, 9일자; 「讀賣新聞」, 1994년 11월 7일자, 9일자

난 것처럼, 일본의 여당 방북단의 방북 외교에 한국측이 불쾌감을 전달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것도 일본의 신중한 태도의 요인이 되었던 것이라고 보여진다. 전통적인 우방인 한국과의 사전 합의없이 무리하게 일본이 대북 접근을 확대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제약 요인은 현재에도 여전히 북일 수교의 억지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후로 1995년에 들어와서 일본 고노(河野) 외상 등이 지속적인 수교 협상 재개를 요구하여 1995년 3월 와타나베(渡邊) - 김용순 회담에서 협상 재개에 일단 합의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3당 선언의 해석에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서 일본측에서 KEDO와 대북 식량 제공을 통한 수교 여건 조성을 모색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1996년도에 와서 히시모토 내각은 추가 식량 제공을 미끼로 수교 협상의 불꽃을 터보고자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북일의 수교 협상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제약 요인으로 쉽사리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북미의 관계 정상화가 급진전되고 북한의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북한 정권의 위기로 발전할 경우 북일 접촉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1996년에 들어오면서 계속되고 있는 북한 고위층의 이반 현상이 북한 붕괴의 조짐이라고 보는 것은 성급하겠지만, 북한 정

권이 위기감을 느낄 것은 분명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 김정일 정권은 일본으로부터의 경제 원조가 파급시킬 부정적 영향도 감수하고 경제난 해결을 위해 북일 수교에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히시모토 내각의 대북 수교 정책 전망

최근의 비교외교정책론의 연구 성과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외교 정책은 외부 환경 요인(국제 체제 요인)과 국내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다이나믹한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층적인 분석 수준에서의 일본의 대북 정책의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개인 수준의 요인으로서 히시모토(橋本) 내각 하의 정책 결정자들의 개인적 변수를 보면 히시모토의 정치적 배경은 그는 보수 분류라고 할 수 있는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시 자유당계의 사토(佐藤) 파벌의 직계이다. 다나카(田中)와 다케시타(竹下)로 이어지는 보수 金權 政治 勢力의 핵심으로서 다케시타 파벌이 오부치파(히시모토 부회당 역임)와 정계 개편을 주장한 오자와 - 하타 파벌로 나뉘면서 게이오대학 동문인 현 신진당 대표인 야당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浪)와 대립하게 되었다. 주목할 것은 북한과의 3당 공동선언을 주도한 가네마루도 이 다

케시타 파벌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하시모토의 이념적 성향은 이러한 그의 정치적 배경에서 오부치가 회장으로 있는 經世會의 핵심 멤버로서 점진적 국제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오부치파가 자민당 소수파이고 하시모토가 아직 신진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민당내 다른 파벌 및 연립여당 내의 다른 당파의 정책 조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하시모토의 개인적인 성향이 대북 외교 정책의 결정적인 변동 요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⁹⁾

하시모토가 대북 수교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정책 방향을 밝히지 않은 반면 그의 내각의 외상인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는 대북 수교에 적극성을 보이는 인물이다. 또한 그는 북일 수교를 주도하고 있는 가토(加藤) 자민당 간사장의 東大法大 동분이면서 측근이기도 하다. 가토는 요시다에서 시작된 친미 외교 노

선을 계승하고 있는 미야자와(宮澤) 파벌의 핵심 리더이고 그 자신이 하버드대에서 수학한 경력도 있는 미국통이기도 하다. 가토는 동대 졸업 후 리버럴한 성격의 아사히 신문사에 입사하려 했던 경험도 있고, 외무성에서 아시아 국 중국 과장을 끝으로 퇴임한 경력을 볼 때 대북 정책 결정의 중요 행위자인 외무성내 인맥도 강하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 중요한 당 3역(총무회장, 간사장, 정조회장) 중 하나로 간사장인 가토는 자금과 인사권을 통해 자민당의 여러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하시모토와 원로 세력의 연합인 NHK(Nakasone-Hashi-moto-Kajiyama) 對 YKK(Yamazaki-Kato-Koizumi)라는 대립 구도에서 보이듯이 카토는 방위청 장관 경력이 있고 방위 문제에 정통한 정조회장인 야마자키(山崎) 자민당 뉴리더와도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가토와 이케다 둘다 과거 방위청 장관을 역임하면서 쌓아 놓은 미일간 방위 협력의 조정자 역할을 북한 핵문제를 놓고도 수행할 것임을 추정할 때 대북 정책에서도 미국으로부터의 협조 요청을 접수하는 일본측 채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회당 출신으로서 북미 핵타결 후 수교 협상 대표단 구성의 단장으로 북한 방문을 추진하였던 구보 현 부총리 겸 대장상이 하시모토 내각에서 적극적으로 대북 수교를

9) 하시모토는 1937년생(58세)으로 게이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3년 처음 부친의 오카야마의 선거구를 이어받은 2세 정치인으로서 후생성, 대정성, 통산성 장관 및 자민당 간사장, 정조회장과 총재를 거친 11선 의원이다. 특히, 그는 일본유족회 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이른바 전통 민족주의 세력의 대변자이면서 가토, 모리, 이시하라, 야마자키 등과 자민당 뉴리더로서 그리고 특히, 대중적 인기 정치인으로서 지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또한, 국회에서 태평양전쟁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침략 전쟁을 했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발언 등은 그의 우익적 성향을 표출하고 있다. 그래서 하시모토는 자민당 총재 출마 선언 당시 국가 복표로서 자립 외교,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을 제기함으로써 강력한 국가 일본을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히시모토 내각이 선거 관리 내각으로서 금년 중 중의원 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의 변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내각 구성의 성격에서 볼 때 북일 수교에 있어 기존의 적극적 모색의 태도를 후퇴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진다.

수상 및 내각 구성원의 성향이라는 개인 수준의 변화 요인 외에 일본 국내 정치 과정의 변화를 본다면 사회당의 내각 참여와 신보수주의 세력 중심의 세대 교체 그리고 금권 정치에 대한 비판 여론의 강화 등이 있다. 신보수주의 세력의 외교 정책의 정향이 정치 대국화 - 국제 공헌 확대에 있는 점도 독립적인 대북 수교 촉진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북한의 핵 무장 위협을 외교적으로 해소한다면 국제 핵통제 레짐의 안전성 고양에 공헌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일본의 정치 대국화는 미국의 세계 수준의 방위 부담 요구에 따른 미일 동맹의 공고화와 일체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협조 요구라는 국제적 요인과 중첩된다.

자민당 실력자들의 재벌들과의 정경 유착에 대한 비판 여론과 이에 따른 정권의 불안

정을 해소하기 위해 대외적인 외교 성과로 여론의 관심을 유도하려 한다면, 이 경우도 대북 수교와 일본 국내 정치 과정이 연계되는 경우가 될 것이다. 히시모토 수상 역시 최근에 주택금융전문회사의 불량 채권 문제로 정치적인 곤경에 처해 있다. 현재 일본내 거품 경제 붕괴의 후유증과 정경 유착의 문제는 정치 경제 구조 개혁의 주 관심사로 되면서 일본 국내 정치의 핵심적 변동 요인으로 되고 있어서 대외 정책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외교사를 보면 국내 정치의 위기를 대외 외교의 성과로 전화하는 역사적 전례가 많다.¹⁰⁾

전통적으로 일본은 생산자 중심의 산업 정책때문에 높은 생산성과 공업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같은 수준의 서구 국가와 비교해서 현저히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의 생활대국론자들은 이 이유가 생산자 우선의 경제 정책이 기업 이윤을 소득 분배하여 소비자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이것이 내수 증대 - 소비재 산업 진흥으로 이어지는 內包적 성장을 압박하고 外延적 총생산과 國富만 확대함으로써 부의 왜곡된 분배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게 된다는 데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의 정치 경제 팽창 구조가 거품 경제 이후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과거 성장 효과가 좋을 때는 서민들의 불만이

10) 예를 들어, 명치유신 후 사이고 다카모리의 반란인 서남전쟁 후의 위기를 征韓論으로 수습하려하였고, 1929년의 불황과 경제 공황 이후 만주사변, 중일전쟁으로의 팽창주의로 해결하려 하였던 전례가 있다.

억제되었지만 불경기에 이르러 일본 정치 경제 체제 전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두되게 되었던 것이다.¹¹⁾ 이러한 와중에 다나카-다케시타에서 이어지는 오자와 및 하시모토가 정권의 핵심부로 진출하면서 정경 유착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 꼬리를 물고 대두되고 있다.¹²⁾

이때문에 보수 정치 세력이 불황과 여론의 비난을 외부로 전환하기 위해 대외 외교 성과에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카네마루 신(金丸 信)이 사회당에 선거에서 밀리면서 대북 접촉을 시도하여 3당 합의를 작성했던 사례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북 수교의 요인으로서 이러한 일본 정치 경제 구조의 전반적 불안정성이라는 국내 정치의 요인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동기가 반드시 북일 수교로 이어진다는 개연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중심적 결정 요인까지는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자민당이 사회당의 연립정권 이탈도 방지하고 사회당의 전통적인 대외 정책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북일 수교에 적극성을 보인다는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일본의 신보수 세력 전체가 보수양당 구도를 기도하면서 사회당 등의 혁신 세력의 무력화와 혁신 성향의 탈색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설명이 되지는 않는다. 어쩌면 사회당의 필요성은 전통적으로 대북 접촉이 많았던 사회당 인사들이 대북 수교의 윤회유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는 점에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시모토의 개인적 성향과 국내 여론의 요구 및 정당 정치 과정이 일본의 대북 정책 결정에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 되지만 국내 요인보다는 세계 차원에서의 미일 협조 체제라는 국제적 요인의 일본의 대북 정책에 대

11) 이러한 비판의 대표적인 예로서 「세계 경제는 국경이 없다」, 「新國富論」, 「平成維新」 등의 저술을 한 오마에 켄이치의 일본 정치 경제의 비판론이 있다. 관련된 참고 문헌으로는 Chalmers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Chalmers Johnson, "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In Frederic Deyof(ed), *The Political Economy of New Asian Industrialism*,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Chitoshi Yanaga, *Big Business in Japanese Politics*, Yale University Press, 1968.

12) 다나카(田中)는 복희도 사진으로 다케시타(竹下)는 리쿠르트 사진으로 사위하였다. 가네마루가 연루되어 이슈화된 전형적인 수뢰 사건인 사가와 규번(佐川急便) 사진은 가네모 기요시 니가타현 지사 등과 현재 수뢰 혐의로 구속 중에 있는 전 자민당 부총재 가네마루 신이 미국의 UPS나 Federal Express社와 같은 사람 우편회사로부터 5억 엔의 뇌물을 받고 정부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 10억 엔의 유산 상속세 탈세의 확인(「産經新聞」, 1993. 6. 3)으로 해서 정경 유착과 정치인의 도덕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 정계의 정치개혁론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자민당의 인기가 급락하였고 호소카와(細川)가 이끄는 일본신당이 약진할 수 있는 배경으로까지 되었던 것이다.

한 규정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현재 히시모토 내각의 외교 정책의 방향은 자유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안정적인 국제 정치 경제 질서의 유지를 위해 미국의 전세계적인 평화 유지 전략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¹³⁾ 히시모토의 측근인 이케다(池田) 외상도 취임 직후 외교 연설에서 미일 동맹 강화와 세계 경제 질서의 안정적 유지에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⁴⁾ 이것은 오자와가 이른바 평화 창출 전략으로서 탈냉전기의 일본의 외교 정책의 기축을 미일 동맹의 안정적 유지에 둔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¹⁵⁾ 오자와의 이러한 주장은 신보수주의의 창시자격인 나카소네나 다른 보수 정객, 지식인들이 폭넓게 공감하는 내용으로서 호소카와(細川)수상이 설치한 ‘방위문제간담회’의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이다.¹⁶⁾ 일본은 연정 합의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국과 함께 대량 살상 무기, 그 중에도 핵무기의 확산 방지에 미국을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래서 북미 제네바합의를 존중하여 일본은 북일 수교를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큰 이견이 없으리라고 보여진다. 즉, 일차적인 일본의 대북 접근의 동기에는 역시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의 이행이 배경으로 되는 것이다.¹⁷⁾

또 한 가지 북일 수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서 식량난으로 정권의 위기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북한의 개혁 개방 유도도 역내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동기가 있을 것이다. 일본은 수교 및 경제 원조를 통해서 북미간 핵합의의 실천을 감시하고 개방을 유도할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수교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이것 역시 미국의 핵확산 억지 노력과 공동 이익을 갖는 일본의 탈냉전기의 외교 정책의 기본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 일본의 대북한 수교 교섭에서 나타난 규정

13) 이러한 외교 정책 대강은 히시모토의 시정 방침 연설(『讀賣新聞』, 1996. 1. 25), 국회 대표 진문 요지(『産經新聞』, 1996. 1. 27)와 연립여당의 정책 합의(1996. 1. 8)에 나와 있고 히시모토 개인의 국제 정세관 및 대비관은 橋本龍太郎, *Vision of Japan*, KK Best Seller, 1993, pp. 87~111.

14) 『日經新聞』, 1996. 1. 22.

15) 小澤 一郎, 『日本改造計劃』, 講談社, 1993.

16) 總合戰略研究會, 『日本の總合戰略大綱』, 『中央公論』, 1994. 10; 호소카와 수상 재임시 위촉된 방위문제간담회가 1995년 무라야마 수상에게 보고한 “安保様相と日本の防衛能力”과 1995년 11월에 완성 보고된 신방위 대강안에도 같은 맥락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17) 부시는 1992년 1월 방일 중의 미야자와와의 회담을 통해 이른바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東京 선언을 천명하였는데 안전 보장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일본 및 미국은 미일 동맹 관계의 중핵으로 되는 1960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을 견지하여갈 것을 재확인한다. 이 동맹 관계는 양국이 글로벌 파트너십 하에 세계의 평화 및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 역할과 책임을 지고 협력하여 가면서...” 라고 하였다.

요인으로 국제 요인, 그 가운데에서도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라는 외부 투입 요인의 규정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결론을 맺는다면 북일간 수교의 전망은 한국 정부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라야마 총리는 이미 1995년의 오사카 APEC회담 중의 회견에서 북일 수교를 계속 추진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천명하였다. 신임 하시모토 총리도 기존의 대북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편, 1996년에 들어서서 북미 관계 개선이 가시화될 가능성을 논정하면서 동시에 북일 접촉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일본의 집권 연립여당은 연립여당 대표단을 다시 북한에 파견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日朝議員聯盟을 복원하여 대북한 접촉의 채널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96년 2월에 외무성의 외곽 연구 단체인 국제문제연구소와 북한간의 접촉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1996년 3월 1일자 일본 東京新聞의 보도에 의하면 양국 관계자가 수교 협상 재개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함으로써 양국간 접촉이 계속 진행 중임을 시사하였다.

이처럼 일본이 대북한 수교 협상에 적극적인 요인으로는 본 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근원적 요인이 탈냉전기에 대두된 북한의 핵무장의 가능성에 있었다. 탈냉전기의 미국의 대외 정책의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 가운데 하나는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체계의 확산의 억지인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확산 자체가 핵통제 레짐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에 머물지 않고 이것이 중동이나 회교원리주의 세력 및 기타 종교 민족 분쟁 지역으로 확산되는 데에도 예민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떠한 상당한 외교적 손실도 감수하더라도 핵확산 억지라는 사활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대북한 유화책을 선택하고 있다. 한편, 동맹국 한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북 접근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은 미일 동맹을 앞세워 일본의 동참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대북 쌀 제공과 중유 제공 비용 분담 등 미국의 안보 분담의 요구에 순응하여 대북한 유화책에 동조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북일 수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일본의 하시모토 내각은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 정책의 수위와 발맞추고 북한내 김정일 정권의 대일수교 의지의 강도 변화 등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1996년 중에도 대북 관계 개선을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